

여수박람회 종합 기본계획 확정

민자 유치 구체적 대책이 없다

전시관 수 대폭 줄어 들고 면적도 축소 공항 활주로 언급 안해 예산 반영 미지수

정부가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열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모두 2조3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여수박람회 종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여수엑스포 종합 기본계획 시안을 제시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전시관 위치, 면적 조정, 상징 기념물 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최종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여수엑스포를 위해서는 꾸준한 점검과 함께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 엑스포 기본 계획안과 문제점 등을 조망해 본다.

◇**기본안과 달라진 점**=이번 확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시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우선 공청회 등에서 여수세계박람회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 건립 요구에 따라 수변 광장에 상징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상징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조직위와 여수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상징조형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 전시관 수도 기존 8개관 16개동에서, 7개관 12개동으로 축소됐다. 부제관이 6개에서 4개로 통합됐으며 국가관도 출입구 광장이 협소함에 따라 4개에서 3개로 줄었다. 여기에 기업관

도 큰 면적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개에서 1개로 통합됐다.

전시관 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전시관 면적도 기존의 10만8천303㎡에서 9만4천494㎡로 줄었다.

한편 관람객이 박람회 주제를 느낄 수 있도록 BIG-O에서 박람회역까지 수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새로 추가했다.

◇**보완해야 할 점**=우선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2012 여수엑스포 총 사업비는 2조389억원. 이 가운데 민간 투자는 7천107억원이다. 주요 민자사업으로는 아쿠아리움(586억원), 콘도(265억원), 엑스포타운(5천193억원), U-EXPO 구축(300억원), 다목적 공연장(350억원), 문화행사(240억원) 등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 침체로 민자 유치가 과연 활성화 될 것인지 의문인 상황이다.

정부는 아쿠아리움과 엑스포타운의 경우, 순수 민자사업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공공보조를 통해 민자유치를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상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민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라면 여수박람회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수박람회를 위한 SOC 확충도 관건이다. 목표-광양 고속도로, 여수산단진입도로,



한승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여수 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도 77호선(돌산~화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없다면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 완공될지 미지수다.

실제로 여수공항 활주로 확충도 이번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 여수신항 폐쇄로 인한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여수 항운노조 작업권 상실에 대한 보상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전망**=정부는 확정안을 통해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여수는 해양 관광-레저는 물론 해양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정부

는 남해안 선-벨트 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계획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박람회 이후의 시설 활용 계획과 추가 투자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전엑스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수박람회 이후 남해 중부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장기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해양생물연구소-바이오 센터 통합 필요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와 최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이 유사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림수산환경위원회 이홍제 의원은 25일 전남도청 해양수산환경국 및 해양바이오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 초 개관한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가 해양생물 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장비구축 및 교육훈련, 컨벤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10년 개관예정인 추진중인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역시 해양생물자원활용 기능성 제품 개발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기로 한 것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와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밀분석하고 재검토, 일부 유사기능은 통합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금속 토양 분석 못하는 농기센터 많아

전남도 내 일선 시·군농업기술센터 가운데 상당수가 중금속 토양분석이나 액비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에서 분석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농림수산환경위원회 신윤식 의원은 25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종합검정·분석에서 일반 토양검정은 전 시·군에서 가능하지만, 중금속 토양분석의 경우 12개 시·군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액비분석 또한 17개 시·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금속 토양분석이나 액비분석이 불가능한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검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검정 수수료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시·군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부 검정기능이 없는 시·군에서는 검정기능을 보완하고 전문인력을 확보, 지역 농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 전남도·여수시 반응

전남도는 25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여수박람회 종합기본계획'에 대해 사업비와 전시관 면적이 축소되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완·조정과정에서 조율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우선 총사업비 부문의 경우 유치단계에서의 기본계획에 비해 22%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공청회 당시 예상사업비 2조3천886억 원에 비해서는 14%인 3천497억 원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사후활용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감안했다고는 하지만 전시관 면적이 당초 기본계획에서 예상했던 10만8천308㎡에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9만4천494㎡로 16%나 줄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세계적 규모의 아쿠아

“사업비 공청회 때보다 줄어 보완 총력” 전남도

“아쿠아리움 국내 수준 머물러 아쉽다” 여수시

리움과 함께 박물관과 등대 전망대 등을 갖춘 고층건물을 짓고, 건물 후면에는 한옥단지를 조성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기본계획안을 보완·수정함으로써 박람회 성공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는 아쿠아리움의 규모가 여전히 국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

이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차원에서 아쿠아리움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3천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또 여수신항 기능전환에 따른 대책으로 '신항내에 관광선과 역무선이 접안할 수 있는 대체 접안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KTX의 직접 연결이 늦어짐에 따

라 박람회장 접근성 향상과 외국 관람객 유치를 위해 중·대형 국제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여수공항 활주로를 2.1km에서 2.5km로 확장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박람회 기본계획이 시민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만큼 분열보다는 시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형기·채희종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對北지원사업 계속

배합사료 공장 건설 추진 남북교류협의회 오늘 訪北

광주시와 (사)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상임공동대표 조철현·이하 협의회)가 대북 지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5일 광주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안치환 광주시 자치행정과장과 정영재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이사 등이 26일 평양 사동구역 내에 배합사료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방북한다.

방문단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북한 체류기간 동안 배합사료 공장설립 부지를 둘러본 뒤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광주시와 협의회가 배합사료 생산설비를 지원하되, 공장부지와 공장건설은 북측에서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평양시 사동구역내 5천㎡의 부지에 하루 50t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는 배합사료공장은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짓게 된다. 7억원에 달하는 기계설비 지원 비용은 광주시가 올해와 내년 5억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은 시민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함경남도 등 수해지역 주택복구 지원사업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시멘트와 강관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